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

이용식
문화일보 정치부장

I. 선거보도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

12월 19일 실시될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둘러싼 논란과 마찰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특정 언론사와 특정 정당 후보 사이의 충돌, 특정 기사를 둘러싼 논란이 줄을 잇고 있다. 그만큼 정치부 기자 및 데스크의 고민도 깊어간다. 한국적 정치, 한국적 언론의 현실 속에서 사실의 전달 이외에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언론 차원의 문제를 넘어 선거 결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사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루지만 선거관련 보도는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1)명백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정치적 논란과 관련된 기사가 많고, 2)득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언론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사의 경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시비를 불러 일으킨다.

그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되는 측에서 담당 기자 및 데스크 등 언론사에 항의를 한다. 특별한 사실의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대화로써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도로 끝난다.

그러나 종종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인식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협의를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물론 소송으로 가고, 선거보도의 경우 소송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형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명백한 사실의 오류일 경우 어떤 식으로든 빨리 상황이 종료된다.

선거보도의 경우, 피보도 당사자와 언론사간의 견해차이가 끝까지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형평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특정후보에 불리한 보도라는 것이다.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이 같은 논란은 발생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과거 발언들, 즉 언론관, 노동관 등에 대한 보도 및 노후보의 반발이나 최근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보도 및 한나라당의 불만 등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II. 사실 보도와 형평성 및 정치적 고려의 충돌

따라서 선거 보도에 있어서 담당 기자나 데스크가 가장 자주 직면하는 고민은 사실대로 보도할 것인가, 정치적 형평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절대적 기준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형평을 고려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늘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도 이른바 ‘공방’기사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어느 일방의 주장, 또는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실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고, 대등한 형태로 편집하게 된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엄격한 사실 위주의 보도, 객관적 가치 판단에 기초한 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선거 담당기자나 데스크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언론 내부적 측면에서 볼 때, 사실확인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보다 분명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어려운데다, 일정 부분 확인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측에서 필사적으로 해명하기 때문에 해명에 대한 재반박까지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인력의 부족과 시간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상태여서 정보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론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치권에서 오는 유형무형의 압력을 들 수 있다. 어떤 사실을 취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자들이 알게 된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 기사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측에서 때로는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유력한 후보자들의 경우 완전히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언론사 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III. 어떻게 할 것인가-제도적 장치의 도입

복잡한 정치 현실과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선거보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각 언론사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2)선거보도 자체에 대한 접근방식의 개선이라는 두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일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우선 제도적 장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도입, 활용하고 있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활용해도 될 것이며, 선거보도의 경우 더욱 강화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유사한 것이지만 중립적 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체 감시단이나 심의팀을 운영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치로는 후보자들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언론사들은 반론권 수용에 매우 인색한 편이다. 그러나 선거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참으로 심각하다. 이 때문에 이유있는 반론의 경우, 선거 보도에 한해 확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대외적 장치들이라면 대내적 장치도 필요하다. 언론사 내부 분위기의 중립성 유지, 보도 목적으로 습득된 정보의 보도 목적 외 사용, 언론사나 특정 개인의 출처 등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개인의 정보 유출 등으로 일부 언론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를 위해 내부 윤리규정을 만들고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일종의 의지인 셈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두면 정도(正道)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선거보도 자체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다. 변화무쌍한 정치상황 속에서 어떤 절대적 잣대도 없이 사실상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V. 선거보도 준칙의 유용성

문화일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자체 선거보도 준칙 20개항을 발표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준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당연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선거기사의 취재·작성 편집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간과했던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상식의 환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준칙은 20개 항목 및 이에 대한 세부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선거보도 기본방향] 1)정책대결에 초점을 맞춘다. 2)엄정 중립을 견지한다. 3)월 1회 정기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심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4)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 이슈를 발굴, 보도한다. 5)인터넷 시대에 따른 변화를 적극 소개한다.

[후보자 집중조명] 6)도덕성·국가관과 병역·세금·재산 등을 검증한다. 7)해당공직에 적임자인지를 검증한다. 8)공약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9)말바꾸기, 전과 등 과거문제도 추적한다.

[공명선거 저해 행태 감시] 10)지역감정 조장행위는 단호히 비판한다. 11)돈선거 의혹을 끝까지 추적한다. 12)근거 없는 폭로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13)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정책이나 관권선거를 감시한다. 14)선거 이후 공약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정치개혁과 국가발전 지향] 15)선거 정치제도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16)개혁에 기여하는 후보와 운동방식을 비중있게 소개한다. 17)신진 소수세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한다. 18)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문화일보 자체 점검] 19)금품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20) 외부 모니터 제도를 도입, 준칙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준칙이 모두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보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취재 현장에서 본 선거보도’라는 주제와 관련, 앞서 제기한 인식들을 토대로 선거보도 과정에서 정치부 데스크로서 부딪히는 문제점과 나름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및 해결책을 언론의 입장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V.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한계

선거 때마다 선거보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리고 언론계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되풀이되어 왔다. 역시 6·13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언론계에 심각한 반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넘기기에 앞서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언론계 외부에서도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비판의 요지는 대개 정책 공약 위주의 보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민심의 밑바닥을 제대로 읽지 못해 예측에 실패했다, 특정 후보 또는 정파에 대한 편향성이 있었다는 등이다.

이는 선거보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적이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개혁이 출발점이자 중착점이며,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선거보도의 개선 문제가 절실하다.

특히 12월 대선을 3개월 여 앞둔 현 시점에서 선거보도는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구도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바람직한 선거보도라는 관점에서 더욱 일탈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선거보도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지금부터 선거보도의 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10가지로 나눠 제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들을 모색해 본다.

1) 정책 공약 위주의 선거보도는 가능한가?

선거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공약 위주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 원인은 선거전이 정책 공약 대결 위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호감을 살 만한 정책이나 공약이 있으면 모든 후보나 정당이 발표한다. 한마디로 ‘정책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독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당 후보자들간의 정치적 공방(대안을 가진 정책 공방이 아닌)에 대해서 독자들은 비판하면서도 열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책 얘기는 아주 침해한 것이 아니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독자들의 기호를 외면할 수 없는 언론으로서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세 번째는 정치 공방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정부나 공직자의 정치중립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근거가 희박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는 상당한 의미를 가졌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언론의 책임은 없는가?

반드시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견을 분석해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고, 그것의 숨은 의미를 잘 찾아내서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기자들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치열하게 분석하려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부족으로 깊이 파고들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독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선을 잘 만들기만 한다면 독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도의 초점을 바꾼다면 당연히 인력의 재배치, 지면과 뉴스 가치판단의 재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 어느 한 언론기관이 하기는 어렵고 여러 언론계 전반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풍토가 생긴다면 가능할 것이다.

2) 양비론, 공방 기사에서 탈피할 수는 없는가?

정치 공방이든, 정책 공방이든 형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하게 공방 기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비교적 많은 자료와 준비를 토대로 한 어떤 이슈가 폭로 발표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 한마디를 붙여 공방기사로 만들고 만다. 물론 제작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일정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론을 소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최대한 불편부당의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리적 형평성’ 보다는 ‘진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같이 부딪치는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공방기사로 다루더라도 양측 주장, 특히 쟁점 부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3) 엄정 중립은 이뤄지고 있는가?

한국 언론은 아직 선거보도에서 엄정 중립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기도 하는 미국 언론의 경우도 일반 기사에서는 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독자들이나 국민들은 어느 언론이 누구 편을 들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실제로 비공식적으로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엄정 중립을 절대적으로 견지하는 것은 어렵다. 또 실제로 무엇이 중립인지에 대한 판단도 언론사마다,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치부 내부에서, 또 편집국 차원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고, 또 외부 영향이 개입될 소지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형평성의 문제는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물리적 형평을 끝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모든 후보자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지, 또 법률적 후보자가 되기 이전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을 모두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 3~4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의 인터뷰나 토론이 있었는데, 모두 동일하게 하기는 했다. 그렇다면 누구나 출마 의사만 밝히면 동일하게 할 것인가. 순서는 어

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후보자간 토론의 경우, 모든 후보자를 한자리에 모을 것인가.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선두 2~3명만 모을 것인가.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식과 관행'에 따라 그때그때 각 언론사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있다. 물론 상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려는 언론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현장 중심, 유권자 중심 보도는 되고 있는가?

현재의 선거 보도는 거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만들어 내는 어젠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명이나 연설 공약을 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정당 중심, 후보자 중심 보도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선거의 현장, 흔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후보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들에게 호소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그 같은 기준에서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낮았을 때는 이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을 수 있다.

이제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나름대로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언론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있다.

조금 사소한 것 같지만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언론 용어가 상당히 많다. 표발, 텃발, 표발같이, 표몰이, 표훔치, 공략 등의 표현이 이 같은 후보자 중심 보도 행태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5) 선거보도의 과학화는 가능한가?

흔히 경마식 보도라고 해서 지지도 중심의 기사 판단과 보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또 지지율에 대한 보도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지율 보도는 가급적 최소화하되, 보도할 경우 최대한의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히 누구누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거나, 몇강(強) 몇약(弱) 구도라는 식의 표현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많은 기사가 이 같은 식으로 작성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잣대에 의해 기사의 가치 판단이나 기사량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과학화는 지지율 자체를 넘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그리 엄밀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러다 보니 전국에서 한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경우 언론의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크게 틀려 문제가 된 경우도 여러 번 있다.

과학화를 위해서는 정기적 여론조사가 절대 필요하다.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언론사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여론조사가 이뤄지더

라도 한번의 숫자를 보는 것 보다 그 경향성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 경쟁적이지 않은 매체끼리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신문과 방송 또는 주간신문 등이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해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론조사만을 기준으로 양자대결, 3자 대결 구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지면 구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특히 선거에 임박해서 그러한 보도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6) 후보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는가?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선거 공보나 후보자들의 홍보물이 후보자의 경력이나 공약을 소개하지만 이것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병역 세금 재산 전과 등의 문제에서부터 국가관, 과거의 말바꾸기 여부, 공약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한 언론기관이 모든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더욱 그렇다.

다만 모든 언론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면 출마자 전원은 아니더라도 유력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흐른다면 출마자들도 조심할 것이고, 선거구 주민들의 자체 감시와 언론사에 대한 제보 등으로 선거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도 있다.

7) 부정선거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금품 살포나 유권자 매수, 흑색선전 등은 유능한 정치 신인의 진입을 방해하고, 유권자를 타락시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강력히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품 수수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선관위 정부 당국 등과 협조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자체적으로 제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흑색선전 발언이나 정체불명의 흑색 유인물이 살포됐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비판적으로 보도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로 흑색선전 유포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묵살하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흔히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날까 하는 식의 생각으로 일단 보도하고 본다. 또 많은 경우 그러한 소문들이 다소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도할 경우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얼굴 없는 공격, 정치철학이나 공적 능력과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공격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수법만을 놓고도 엄정한 비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흥미롭고 독자의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8) 소수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현재의 정치권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신진인사의 진입이 필수적이다. 또 정치 사회적 관념의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여성이 불리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정치능력이 사장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또 소수정당의 경우, 일반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진 소수 여성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는 거대 정당의 공천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다만 이들에 대한 ‘외면’을 시정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인가?

9) 당선자의 공약이행 여부 감시 가능한가?

온갖 감언이설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게 많은 정치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심지어 국민 교육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추적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우선, 취재인력의 부족 즉 취재상황의 열악 때문이다. 둘째로는 당선된 사람에 대한 배려 또는 예우, 편들기 차원과 관련된 경우도 없지 않다. 언론들도 부지불식간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논리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당선되면 그때부터 또다른 시작’이라는 자세로 선거기간 중의 공약들에 대한 감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제로 인력의 취약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선거 당시 공약을 추적해보면 어느 정도 가능한 할 것으로 본다.

10) 선거 취재과정서 부딪치는 윤리적 문제들

이 문제는 취재 보도의 문제라기 보다 윤리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다루기 어렵고 미묘한 문제이지만 취재현장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금품 향응 등에 대한 입장은 간단하다.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진영을 취재하는 경우 부득이 교통편을 함께 이용하거나, 기사의 작성 및 송고 등을 위해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숙식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취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계 전체의 컨센서스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들겠다. 최근에 만난 한 유력 대통령 후보는 지방에서 1박하지 않고 무리해서라도 서울을 왕복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고 단지 기자들과 함께 1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 숙박비 항공료 정도는 언론사가 부담하지만 그래도 부대 비용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언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VI. 대책과 전망

선거 보도 역시 다른 보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절대적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수 없다. 보편적 기준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거가 시작되면 이런 저런 상황이 복잡하고 어지럽게 발생하고, 또 유사한 상황이 짧게는 3~4개월, 길게 잡으면 1년 이상 계속된다는 점에서 상황에 휩쓸리기 쉽다. 즉 당연한 원칙 같은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별 생각 없이 경마식 보도로 흐른다는가, 부지불식간에 흑색선전을 사실상 소개하는 보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재 기자, 데스크, 각 언론사, 언론계 차원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단순히 선거 기사 문제를 넘어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 언론 감시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선거보도를 감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리 전문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 이들 단체들도 좀더 전문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거보도가 한차원 발전하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될 것 같다. 이른바 3김 시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한국 정치 자체가 40년만에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언론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